

# 어촌·어항을 둘러싼 주요 이슈와 정책방향



박 상 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어촌양식연구실 부연구위원

## ● 들어가면서

어촌·어항은 단순히 수산물을 생산하고 양육하는 어업인 중심의 공간에서 벗어나 도시민의 문화·여가뿐만 아니라 해양레저관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과 역할로 재평가 되고 있다. 또한, 어촌·어항은 수산업의 6차 산업<sup>1)</sup> 핵심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1차 산업인 수산업의 생산부터 유통·가공 등 2차 산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분야에 이르기까지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다양한 소득원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어촌·어항의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산자원과 일자리 감소는 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연결되어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어촌경제의 활력이 침체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어촌·어항을 둘러싼 이슈 가운데 어가경제, 귀어·귀촌, 어촌재해, 어촌복지 등에 대한 동향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고는 2014년 KMI 해양수산전망대회의 자료집 가운데 저자가 집필 하였던 제3장 ‘어촌어항과 어촌복지의 동향과 전망’ 부분을 토대로 수정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 ● 소득 정체, 일자리 감소에 대응한 새로운 어촌정책 필요

2012년 어가소득은 전년 대비 3.2% 감소하였다. 경상소득은 2.7%, 비경상소득은 8.4%나 줄었는데, 세부 내역별로는 어업소득이 4.4%, 이전소득 1.1%, 어업외소득 0.2%로 어업소득 감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 6차 산업이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농림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사업으로 농림수산물 등의 생산 및 그 가공 또는 판매를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활동으로 농림수산물 등의 가치를 높이거나 또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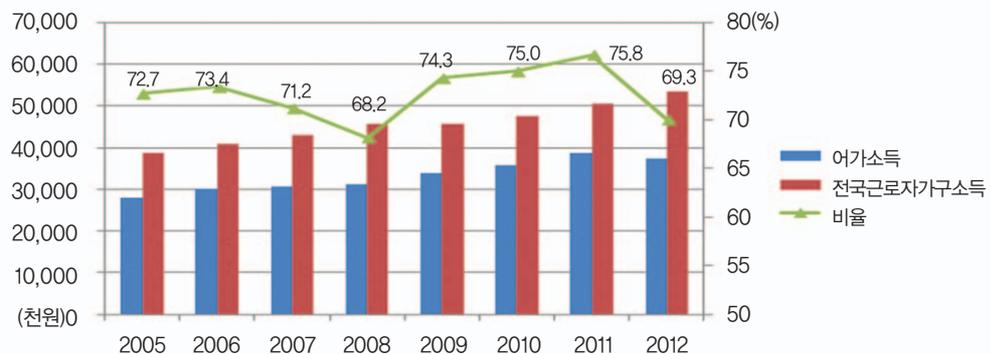


〈표 1〉 어가소득 동향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가율('12/'11)
어가소득(A=B+C)	31,176	33,945	35,696	38,623	37,381	-3.2
경상소득(B)	26,344	30,213	31,729	35,119	34,171	-2.7
어업소득(D)	13,801	16,220	16,607	20,432	19,539	-4.4
(어업총수입)	(33,457)	(35,350)	(37,682)	(45,875)	(45,228)	(-1.4)
(어업경영비)	(19,656)	(19,129)	(21,076)	(25,444)	(25,689)	(1.0)
어업외소득	10,120	11,136	11,931	11,378	11,360	-0.2
이전소득	2,423	2,857	3,191	3,309	3,272	-1.1
비경상소득(C)	4,831	3,732	3,968	3,504	3,210	-8.4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각 년도.

2012년 전국 근로자가구 대비 어가소득의 비율은 69.3%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에서 다시 하락하였다. 이러한 하락세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다시 감소하였는데, 이는 어업소득 뿐만 아니라 어업외소득, 이전소득 등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주 : 전국 근로자가구는 2인 이상 가구임.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그림 1〉 어가소득 · 전국 근로자가구소득의 비교

어촌의 일자리 수는 2000년과 비교하여 2012년 어업분야 전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모두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로어업,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 중 양식어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2000년 453개소 16,581명에서 2012년 163개소 1,605명으로 90.3%나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수와 일자리수가 급감하는 요인은 양식장의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있음과 동시에 어촌경제가 침체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어촌의 사업체 및 일자리 수 동향

구 분	2000년	2012년	증가율('12/'11)
전체 사업체수(종사자수)	861 (31,302)	343 (5,740)	-81.7
어로어업 사업체수(종사자수)	331 (13,981)	109 (3,623)	-74.1
양식어업 사업체수(종사자수)	453 (16,581)	163 (1,605)	-90.3
어업관련 서비스업 사업체수(종사자수)	78 (740)	69 (509)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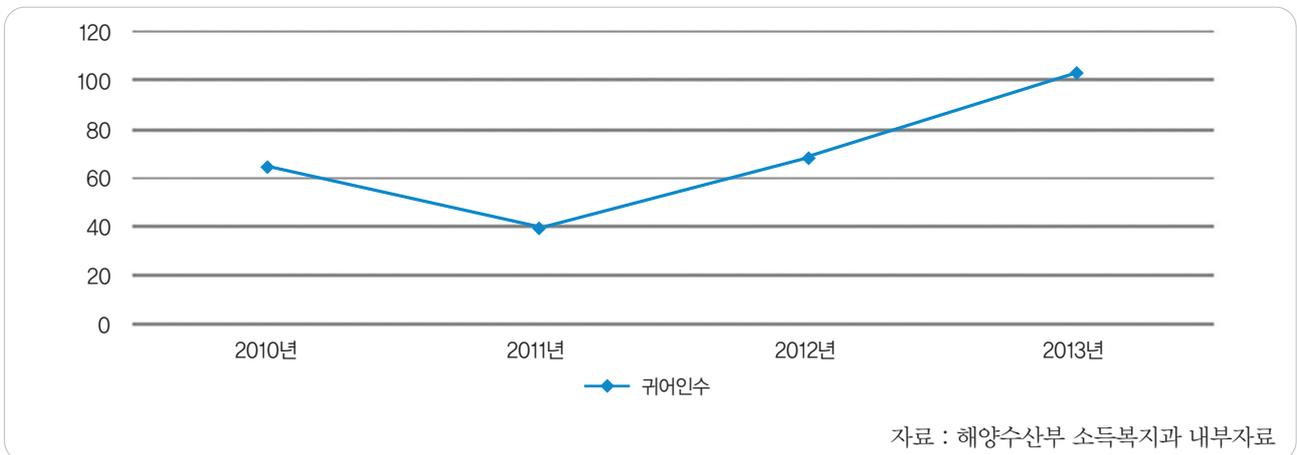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각 년도.

어촌은 인구감소, 고령화에 따른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득원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어촌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어촌의 소득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시에 어촌 6차산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어촌정책은 어업생산기반 확충과 낙후된 어촌의 정주환경 개선, 어업외소득 창출을 위한 하향식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 왔으나 이러한 어촌정책으로는 침체되고 있는 어촌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한계에 봉착했다. 따라서 어촌의 다양한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수산업 간 융합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 간에 융·복합을 통한 사업의 다각화, 고도화,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함으로써 어촌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귀어·귀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발굴에 나서야

어촌의 귀어·귀촌 정책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되어 2010년 65명, 2011년 40명, 2012년 68명, 2013년 103명으로 나타났다. 귀어·귀촌 정책지원사업 대상자가 증가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홍보와 베이비부머(Baby Boomer's)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 되면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귀어·귀촌 정책지원 대상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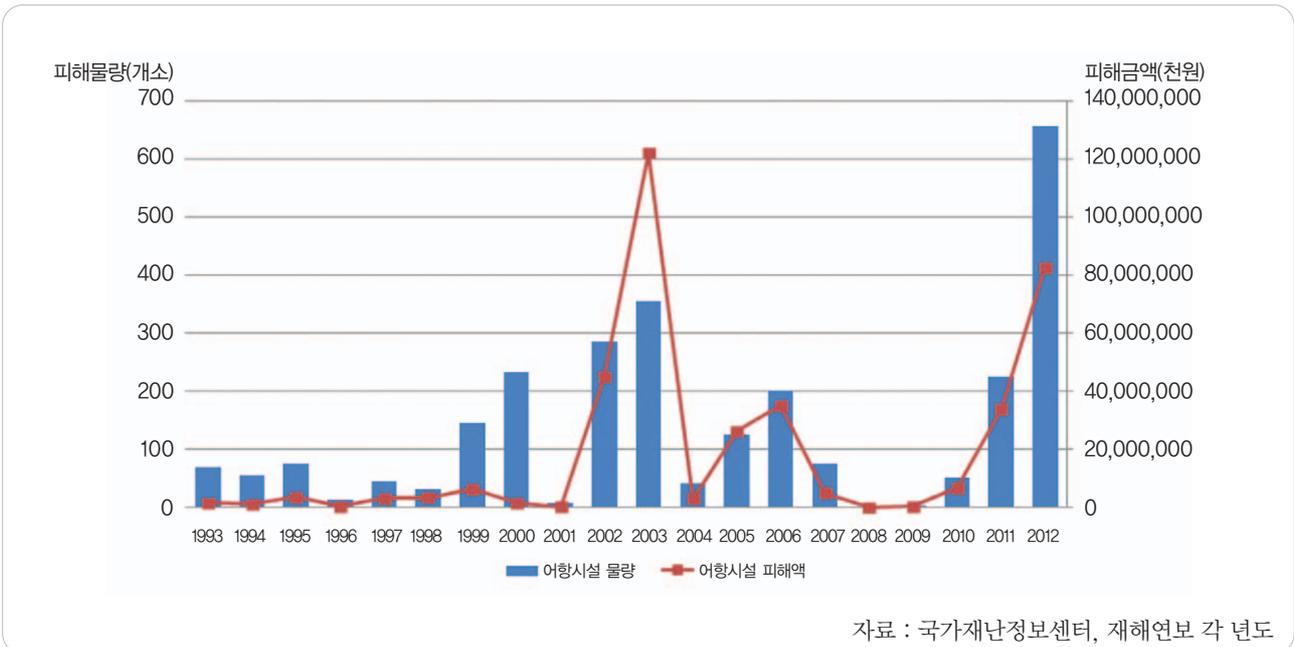
하지만 귀어·귀촌 정책지원사업 대상자의 경우 양식어업과 전남지역이 60% 이상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귀어·귀촌 이후 안정화되기 까지 필요한 지원이나 애로사항 등 실태조사와 귀어·귀촌 확대방안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귀어·귀촌의 정착과 확대를 위해서 '귀어·귀촌 지원센터'가 국립수산물과학원에 설립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귀어·귀촌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도시민이 귀어·귀촌을 하는데 있어 진입장벽의 완화·해소, 현장 밀착형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 어촌재해 피해규모 증가에 따른 예방적 대응방안 마련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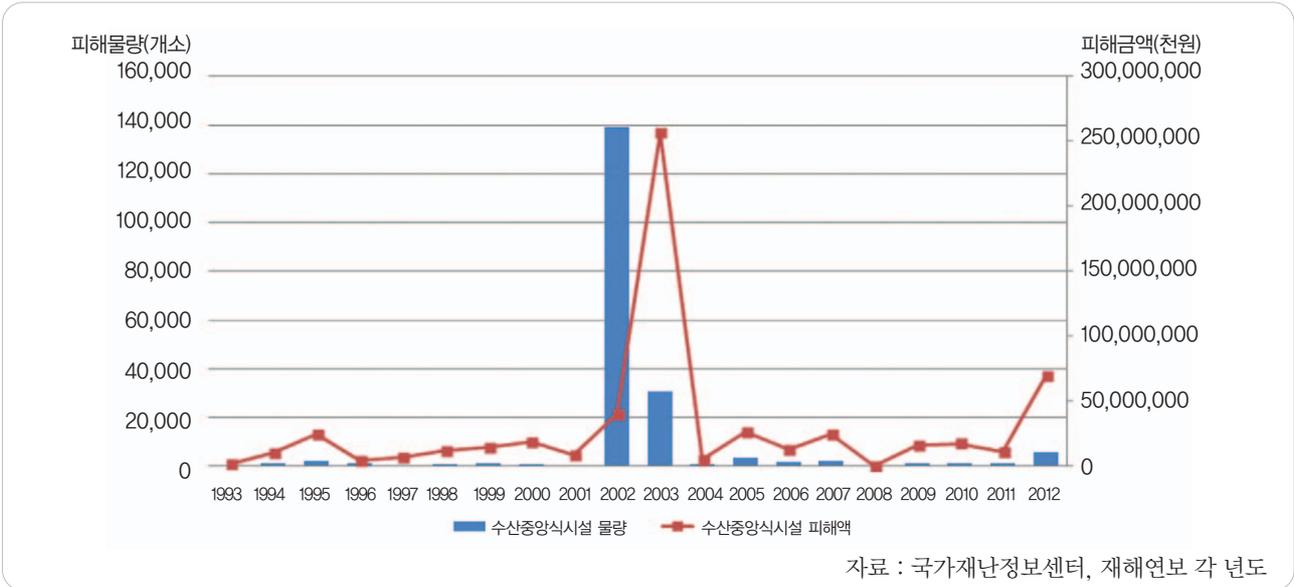
어촌의 재해는 크게 어선, 어항시설, 수산증양식시설, 양식수산물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어선의 경우 기상예보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어업인들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어선의 피해규모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어항시설은 2000년 대 접어들면서 피해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태풍의 내습과 어항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30년 간 태풍의 발생빈도는 연간 0.6회에서 1.2회로 2배 가량 증가하였고, 최대 풍속도 50%나 증가하였다.



〈그림 3〉 어항시설의 피해물량 및 피해금액(1990~2012년)

셋째, 수산증양식시설의 피해규모도 2003년 매미를 제외하면 1990년부터 2012년까지 피해물량과 피해금액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수산업의 비중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되면서 양식시설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4〉 수산증·양식시설의 피해물량 및 피해금액(1990~2012년)

어촌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최근 자연재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어선 및 양식 수산물의 재해보험은 증가하고 있으나 어선원 재해보험은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어촌재해에 대한 예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수산분야의 빅데이터 수집을 통한 어촌재해의 예측시스템 구축, 어항시설 및 수산양식시설의 적기 보강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 ● 어촌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해수부 차원의 대책 필요

2004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어촌의 복지는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도서지역 어촌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의료여건은 우리나라 전체 464개소 유인도서 중 의료시설이 없는 경우가 324개소로 70%에 달하고, 의사가 없는 경우도 401개소 86.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촌의 복지 사각지대는 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등 삶의 질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어 해양수산부 차원의 어촌·어업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가칭)「도서등지의 어업인 복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 하는 등 어촌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 참고자료

- 국가재난정보센터, 재해연보, 각 년도.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각 년도.
- \_\_\_\_\_,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 \_\_\_\_\_, 어업총조사, 각 년도.
- \_\_\_\_\_,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각 년도.